

경기총선연대 정책질의/답변

발신: 한나라당 고양시 일산 갑지구당 오양순 의원실

1. 부패방지법

내부자 고발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폐쇄된 집단의 비리를 밝혀낸 사례 중 대다수는 내부인의 양심선언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집단내의 권력층인 경우가 많은데, 일상의 편안함과 묵인과 동조로 얻을 수 있는 대가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라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자고발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의 눈이 어디에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준다면 부정부패예방의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2. 새만금간척사업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21세기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시화호의 오염사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전북의 새만금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과 깃벌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99년까지 공정의 59%를 끝마쳤고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무조건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미 공사주체 측은 공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연구중이며 그 모델을 찾기 위해 충남당진의 대호간척지에서 친환경 간척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문제는 언제나 대립되는 문제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

은 양자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국토개발,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한 환경보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환경친화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3. 공직선거 출마자 공천 여성후보 30%이상 할당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여성을 기용하려해도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소위 인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인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비록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선출직을 시작으로 임용직에 까지 여성인력채용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은 지구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직선거의 출마자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30%이상으로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로 추천하는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재된 많은 훌륭한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또한 교육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실노동시간 단축문제

실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47.9시간(건설업45.1시간)이고 전국 건설산업노조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설업 현장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69시간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국제적으로도 최장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서유럽국가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최근 고실업사태 해결수단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IMF이후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취업확대를 위해서 실노동시간은 단축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인권위원회 문제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 형태를 취해야만 독립성과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 형태를 취하는 한 법무부의 산하기구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독립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인권위원회의 주요 감시, 조사 활동의 대상이 될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천부적이고 선국가적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의 확대문제

경기도 내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우리 일산지역도 고교 비평준화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까지도 밤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입시전쟁을 치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산, 분당, 안양 등의 수도권 비 평준화 지역에는 97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 결성될 정도이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은 상당수 학부모들이 비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용역이 올해 10월에 발표되는 대로 비 평준화 지역에 대한 평준화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 심의기구 여부

심의기구가 바람직합니다.

사립학교가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일부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맡고 있는 사학의 비리는 우리아이들과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공동과제임

니다.

교육당국의 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파행적인 행태를 견제하고 건실한 학교운영을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 구조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 지구당내 경선 통한 후보공천

지구당 내 경선통한 후보공천에 찬성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시 미국의 예비선거제와 같은 상향식 공천방식을 도입하여 당내민주화를 도모하자는 것은 본인의 평소 지론입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구조가 갖고있는 차이점을 최대한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향식 공천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당내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수반되어야 하고, 당내 민주화를 빙자한 의사조작, 왜곡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문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임에 틀림없고 미군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의제공이 우리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 비교해서도 명백하게 불평등한 조약으로 재개정을 통한 정부의 강한 자국민보호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미군이 저지른 10만여건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에 대한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나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형사관할권의 몇 조항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협정의 근본적 불평등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0. 국가보안법 문제

국가보안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찬양고무죄 부분은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사상·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논란이 있었던 만큼 개정의 방향으로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주민투표제 문제

실질적인 주민투표제도의 구체적인 입법화에 찬성합니다.

주지하시듯이 1994년에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명목상 조항으로 남아 있고 입법화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4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법 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낫잡자고 있는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 선거법 개정문제

선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시민연대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정치권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제87조만 일부 손질하고 58조와 59조를 대부분 고치지 않은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 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단체가 부패한 정치권 개혁을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이 이러한 움직임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거법은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

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월13일 총선 에서는 현재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여부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으로 환영받았던 유전자조작식품이 다시 한번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가 조작된 콩으로 만든 두부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 사안은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각국에서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은 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문제

선수협의회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선수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구단과 맺은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선수들 개인으로는 약자의 처지이기 때문에, 선수협의회라는 조직의 힘으로 강력한 구단을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야구 관련제도와 규약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귀하가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입법활동과정에서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는 개인적 소신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당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정당이라 함은 정치적 이념과 소신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므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하겠지만 입법활동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가운데 당론과 개인적 소신이 배치되는 사안이 생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당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 소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배치되는 견해가 유지될 때에는 소신을 가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수의 견해와 다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다원주의 원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매번 당론과 다른 개인적인 견해가 생긴다면 본인이 과연 그 정당의 원칙과 이념에 합치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16. 마지막으로 귀하는 경기도내의 가장 큰 현안 내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환경문제가 수도권 지역의 현안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21세기의 주요 화두입니다. 일산지역을 비롯하여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수도권지역 주민들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지역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면, 크게 네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일산의 식사동, 풍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초고층 아파트(30층)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산지인 곳을 병풍처럼 가리게 되므로 도시미관상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전 남산 외국인 아파트 철거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아파트 높이를 저층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시에서 호수공원 주차장요금과 과태료, 사용료 징수를 골자로 한 '고양시 도시공원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운영수입 증대 차원에서 국제전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유희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상실과 교통난 증가, 입장료 유료화로 인한 열린공간으로서의 기능상실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 수입증대를 위한 단편적인 발상에 의한 유료화보다는 시민의 건강, 문화, 생활공간으로 생각하는 환경친화 마인드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모

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백석동 주상복합단지 건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건물의 높이보다 2.5배 높게 지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 건물이 건립되면 오히려 굴뚝높이 보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서 이 곳에 입주하게 될 1만 여명의 시민과 건물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공해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의 건립에는 우선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공정하고 엄밀하게 시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산권 보전의 차원에서 찬성하고 이씨만,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김대중 정권이 해당지역에 대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대농들은 지주가 다년계약을 하려 하지 않고 임대료와 도지가 상승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고양시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다시 조정하되 해제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비롯한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